



## 파리 합의문과 신기후 체제의 의의

강희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미 오하이오주립대 자원환경경제학 박사
- 삼성경제연구소 기후변화센터장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14~)

15년 12월 12일은 인류 역사상 매우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20** 바로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전 세계 195개국이 ‘파리 합의문’을 도출해 냈다. 아직까지 우리 일반인들이 이 역사적 합의가 향후 우리의 삶과 경제에게 미칠 엄청난 영향을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세계는 이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시대(era)’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의 진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전 세계 각 곳에서 기후 변화의 여파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중위도 지역에 한파가 내려오고, 온난화로 기류가 변하면서 심각한 가뭄이 전 세계를 괴롭히며, 폭발적 에너지를 끌어안은 태풍과 허리케인은 수많은 재해를 유발하고 있다.

지금의 지구 온난화 추세라면, 이번 세기 말에는 뉴욕, 상하이, 홍콩,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일부가 바다 밑으로 잠기게 된다고 한다. 특별히 기후 변화는 최빈국이나 개발도상국 그리고 중소도서국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1992년도에 개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1997년부터 교토의정서를 탄생시키고,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 이행 기간을 설정하여 기후 변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시작부터 당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였던 미국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면서 절음발이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교토체제에서는 선진국들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전 세계 공동 대응의 의미가 퇴색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선진국들은 자기들만 지나친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불평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게 되었다. 결국 최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1위가 되었다.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한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전 세계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 국가를 온실가스 감축 체계 내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기존 선진국과 모든 국가가 함께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도록 하는 포괄적이며, 유인 체계를 갖춘 기후 변화 협상 체계가 절실히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번 파리 21차 당사국 총회에서 타결된 ‘신기후 변화 체제’는 2021년부터 발효되어 중국,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참여시킨 가장 포괄적인 협상 체계인 동시에,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원-원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파리 합의문’의 특징

이번 파리 합의문은 이런 포괄적인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협상문 곳곳에 여러 배려들이 잘 담겨져 있다.

첫째, 참여국들이 파리 합의문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비준, 동의, 승인이라는 세 가지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2001년 미국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주된 요인은 미국 상·하원 모두에서 비준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으며, 이번에도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이 반대할 가능성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비준보다 구속력이 낮은 ‘동의(acceptance)’나 ‘승인(approval)’이 허용될 경우,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명령을 통해 오염 물질인 온실가스를 법적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국 내 난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UN에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여 할당하는 ‘중앙형’ 방식이 아닌,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량(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결정하도록 하고, 승인된 이후에는 이 목표량 달성을 부여하는 법적 구속성을 지니는 ‘분산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교토 체계에서 선진국들만 부담을 진다는 불공평을 해소하는 동시에,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개도국의 감축 행동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 분야(finance)에서는 매년 최소 1000억달러(약 117조원)를 조성하고,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 분야(technology)에서는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술 메커니즘(technology mechanism)’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이를 통해 민간 분야부터 자연스럽게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술과 재원을 연계하여 공동의 편의이 발생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넷째, 청정 개발 체제(CDM)을 보완하기 위한 신시장/비시장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하고, 특별히 양국 간 혹은 지역별 국제 탄소 크레딧 발급 및 국제 탄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담고 있다.

청정 개발 체제는 기본적으로 교토의정서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향후 신기후 체제 내에서도 청정 개발 체제가 지금과 같이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청정 개발 체제는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선진국이 존재하고,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도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신기후 체제에서는 감축 의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따로 없다. 따라서 기존 청정 개발 체제 그 자체 모형으로는 신기후 체제에 적합한 시장 메커니즘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 혹은 비시장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시장 혹은 비시장 메커니즘은 양국 간 자유롭게 감축 방식, 배출권 배분 방식, 사후 검증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보장되리라 판단되며, 이렇게 발생한 배출권은 전 세계 다양한 배출권시장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국가별 혹은 지역별 배출권 시장이 전 지구적 배출권 거래 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신기후 체제는 기존 교토 체제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전 세계 기후 변화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공언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여러 위기와 기회 요인이 공존한다.

### 한국의 위기와 기회 요인

우선 한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로서 향후 본격적인 경제·사회적인 체질 개선의 급선무를 자각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도 화석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발굴과 이의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기술 개발과 정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밀받

침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재정 및 기술과 관련하여서도 한국은 이제 국격에 맞는 기여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파리 결정문'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이제 전 세계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사업을 벌일 것이다. 특히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최고의 기회요인이라 볼 수 있다.

개도국에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발전과 같은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통해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환경-에너지 관련 기술과 산업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동시에 개도국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재자를 자처하는 한국은 보다 향상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분야, 비산업 분야, 교통 분야 등 해당 부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GCF 사무국 유치 국가로서, 기후 금융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금융, 산업, 인력 양성 등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전 세계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후 변화 협상 방식을 실험한다. 만일 성공하게 된다면,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전 지구적 노력을 통해 극복했다는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기후 체제를 애써 외면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도태되는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 ☺